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태호
전화 055-239-4365

보도자료
2023. 3. 30.(목)

제목 **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□□□□□□연맹 ○○○○건설노동조합 부울경본부 간부 구속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(제11조 제1항)

- 창원지검 형사4부(부장검사 엄재상)는 □□□□□□연맹 ○○○○건설노동조합 부울경본부 지부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죄 등으로 오늘(3. 30.) 구속기소하였음
- 수사결과, 피고인은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킬 의사도 없으면서 집회 개최, 각종 민원 제기 등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피해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 등으로 2,340만원을 갈취하여 이를 부울경본부에 상납한 후 임금을 받아 생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 - 피고인은 지부장 취임 직후 2개월간 노조 상급단체로부터 집회신고서 제출방법, 안전문제 고발방법, 피해업체 상대 교섭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후 현장에 투입되어 갈취 범행을 저지른 것임
 - 피고인은 노조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함에도 월급 450만원과 보너스를 약정하고 노조에 취업한 후 위와 같이 갈취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것으로, 실제로 근로자 권익향상 등 노조활동은 전혀 하지 아니함
- 창원지검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하여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
 - A○○(45세, □□□□□□연맹 ○○○○건설노동조합 부울경본부 지부장)
- ※ ○○○○건설노동조합은 각 지역별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 조직(전체 조합원 약 3,200명)으로, 부울경본부 소속 노조원은 약 150명

○ 공소사실 요지

- 위 노조의 본부장, 조직부장과 공모하여 '21. 8.~'22. 9. 경남 지역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6곳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회를 개최하고,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함께 2,340만원 갈취 [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공동공갈)]

2 주요 수사 경과

○ '23. 3. 7. 검찰, A○○ 구속영장 청구(경찰 신청) / 3. 13. 발부

○ '23. 3. 21. 사건 송치

※ 위 노조 부울경본부 본부장, 조직부장은 동종 피의사실로 '23. 3. 16. 구속되어 현재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

3 수사결과와 향후 계획

○ 조직적·직업적 금품갈취

- 피고인은 노조 업무경험이 전무함에도 위 본부장으로부터 '정년 없이 월급 450만원, 연간 보너스 100만원씩 4회, 차량 지원' 등 조건으로 위 노조 지부장에 취임한 후 약 2달간 서울에 있는 □□□□□□연맹 본부에서 '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조사하여 고발하는 방법, 집회신고서 제출 방법, 현장에서 업체와 교섭하는 방법' 등을 집중 교육받았음
- 이후 피고인은 부울경 본부장에게 공사현장 방문여부, 신고 횟수, 구체적 교섭내용과 수령한 금액 등을 보고하였고, 위 본부장은 매주 피고인 등 소속 간부들에게 실적을 압박하는 등 조직적·직업적 금품갈취를 일삼았음
- 결국 피고인은 노조활동이나 현장 노동을 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갈취한 금원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을 유지해왔음

○ 노조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

- 피해업체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의 급여 등에 사용되었고,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일체 없었음

○ 오로지 전임비 갈취를 목적으로 한 공사방해

- 피고인은 실제로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킬 의사도 없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집회 개최 4회, 민원 제기 37회 등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음
- 지속적 공사방해를 못 견디던 피해업체들은 피고인 소속 노조의 근로자를 채용하지도 않은 채 단체협약을 허위로 작성한 후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음

○ 앞으로도 창원지검은 경찰과 협력하여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,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음 ☑